

한·중관계의 발전과 규범 충돌: 현황과 과제*

조영남 | 서울대학교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는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함께 한·중 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영역과 가능성이 전보다 증가했다. 양국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은 그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주와 인권, 법치, 역사 해석, 문화 전파, 발전 모델 등을 둘러싸고 규범 및 가치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충돌로 악화되고 있다. 향후 한·중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에 규범 및 가치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중관계, 규범 충돌, 소프트 파워, 역사논쟁, 한류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는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중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경제교류를 보면, 2008년 양국 교역액은 1,683억 달러로, 이는 한·미(847억 달러)와 한·일(889억 달러)의 무역액을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¹⁾ 양국의 사회·인적 교류도 활발하여, 2008년에는 방중 396만 명, 방한 117만 명 등 모두 513만 명이 상호 방문했고, 매주 837편의 비행기가 양국을 왕복했다. 학생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2009년 재중(在中) 한국 유학생은 6만 7천 명으로 전체 재중 유학생의 1위(27%)를 차지했고, 재한(在韓) 중국 유학생도 6만 3천 명으로 전체 재한 유학생의 1위(70%)를 차지했다.

이 같은 한·중관계의 발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불러왔다. 첫째는 교류 주체의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2009년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1) 참고로 2009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867억 달러로, 이는 대미 수출 376억 달러와 대일 수출 217억 달러를 합한 것보다 274억 달러나 많다.

다양화이다. 즉, 수교 초기에는 주로 정부와 기업이 양국관계를 주도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더해 개인과 다양한 사회조직이 중요한 주체로 등장했다. 둘째는 교류 영역과 내용의 확대이다. 즉, 초기에는 주로 경제영역(무역·투자)과 북한문제가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정치·외교, 경제·통상, 군사·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한·중관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다른 국가 간의 교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빠른 것이다.²⁾

그런데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동시에 부정적 요소도 증가시켰다. 다시 말해, 한·중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영역과 가능성이 전보다 훨씬 커졌고, 이에 따라 양국관계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어려운 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난 시기의 양국관계에서 현안으로 등장한 주요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런 문제들이 예기치 않은 갈등과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4년과 2006년 역사문제 즉,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추진과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중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다. 많은 한·중 학자들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1992년 수교 이후 10여 년 동안 쌓았던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양국 신세대 간에 각종 “문화논쟁”이 전개되고, 이에 따라 상호 비호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각종 사례는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과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통상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양국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가려내고 그것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현재 한·중 간에는 민주와 인권, 법치(rule of law), 역사해석, 문화충돌, 발전모델 등을 둘러싸고 규범 및 가치관의 갈등이 나타나고, 일부는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할 것

2) 최근의 한·중관계는 김태호(2009); 이동률(2008); 김재철(2006); Chung(2007, 2009) 참고.

이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과 “충돌”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규범(norm)의 정의와 의의에 대한 검토이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규정된 행위 표준”을 가리킨다(Krasner 1983, 2).³⁾ 이런 규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특정 행위의 표준을 제공하는 실재적(substantive) 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들이 어떻게 정책결정 기제를 설계 및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적(procedural) 규범이다(Finlayson and Zacher 1981, 276). 이처럼 규범은 국제사회에서 실재적 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 국가행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원칙과 함께 국제체제(regime)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한편 규범은 국제사회에서 국가행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국가의 일탈을 판단하는 기준(표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국제사회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서 정통성(legitimacy)을 획득해야 한다. 습관화와 정통성 획득을 통해 규범은 비록 법률이 되거나 강제로 집행되지 않아도 국가행위를 규정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규범은 국가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엇이 규범인가에 대해 각국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규범은 국가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Goldstein 2002, 326-327). 이는 한·중 간에도 적용된다.

둘째는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는 층위, 영역, 시간에 대한 검토이다. 충돌의 층위(level)는 국가적(state),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 충돌은 층위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국 간 충돌이 직접적인 반면,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는 충돌이 간접적이다. 또한, 충돌의 영역(realms)은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정치·외교, 경제·통상, 군사·안보, 사회·문화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시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현재 한·중 간에는 각국의 정치이념과 정치체

3) 허렐(Hurrell 2002, 143)은 규범을 “선택상황에서 절차적이고 실재적으로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 표준, 원칙 등의 규정적 언명(descriptive statements)”으로 정의한다.

제에 맞는 고유한 규범 및 가치관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양국 간에는 이들 규범 및 가치관을 둘러싼 일정한 갈등이 존재했고, 향후 갈등의 확대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인권·법치, 가치외교(value diplomacy), 역사해석 등이 속한다. 또한, 미래에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규범 충돌이 발생할 영역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새로운 국제 경제규범 형성, 문화충돌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시론(試論) 성격의 논문임을 밝혀둔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양국 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한·중 간의 외교관계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았는데 비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런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초보적 작업이다.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 증가 배경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앞에서 살펴본 한·중관계의 발전이다. 다시 말해, 양국관계의 주체가 다원화되고 교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추세 말고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국의 국내 상황 변화와 새로운 외교정책의 추진으로 이런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Australia Government 2009;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2009; Keidel 2008). 이런 급속한 부상에 따라 중국의 자기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존중 받기를 원한다. 2009년 “G-20” 회의와 코펜하겐(Copenhagen) 기후회의 등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애국주의” 운동의 결과 중국인의 민족 자부심과 자아의식은 전보다 더욱 강화

되었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민주, 인권,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비판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흥의 기회로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및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다. 군사 투명성 부족, 주변국가와의 영토·영해 문제, 중국·대만관계의 유동성 등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주요 요소들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즉,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화질서의 재현을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박홍서 2008; 이희옥 2009). 이처럼 중국의 자기인식 변화와 한국의 대 중국 우려 증가로 인해 이전 같았으면 제기되지도 않았을 사안, 또는 제기되었어도 조용히 해결되었을 사안이 표면화되고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배경이다.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국제지위 추구는 한·중 간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배경이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에 힘입어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 들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서구이념 및 가치와는 다른 “중국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Kurlantzick 2007; Li 2009; CSIS 2009; Whitney and Shambaugh 2009; Lum and Morrison 2008; Hunter 2009; Li 2008; Lu and Wang 2008; Wuthnow 2008).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는 “중국모델” 또는 “베이징 컨센서스”(consensus)의 선전, “평화발전”(和平發展)이나 “조화세계”(和諧世界) 같은 정교한 외교이념의 개발과 추진, 중화문명의 확산 등이 포함된다(조영남 2009, 175-217).

한편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아시아의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아시아 및 세계에서 자국의 지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노력은 소프트 파워 외교를 통해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모델”의 확산, 동양 문화와 서양문화를 결합시킨 한류(韓流)의 전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모두 각국의 국력에 맞는 국제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전개함에 따라, 양국 간에는 규범 및 가치관의 경쟁이 전보다 증가되었다. 만약 한·중 양국이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규범 및 가치관의 경쟁은 갈등과 충돌로 악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양국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정치·외교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정치·외교 영역은 한·중 간에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한 그 차이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본질적인 분야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 이미 정치적 규범 및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향후 단기간 내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중국이 10년 내에 현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화되어 양국간 정치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 영역은 한·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범 충돌은 직접적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양국관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규범 “차이”가 규범 “갈등” 및 “충돌”로 악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가 포함된다.

1. 민주주의와 인권

한·중 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분명한 규범 및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대만(臺灣)과 함께 198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뿌리 내렸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한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은 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Park and Shin 2008). 인권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가치로 수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다는 신념도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은 공산당 일당제 하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단기간 내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중국은 소위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물로서, 정치학에서 말하는 선거 민주주의나

자유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다(조영남 2009, 55-98). 또한, 인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일종의 “특수성론”을 주장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우선, 중국에 따르면, 인권은 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주권 우선론). 또한, 인권에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있는데 후자가 더 중요하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존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이런 면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이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생존권 우선론). 마지막으로, 인권의 내용과 중요성은 개별 국가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인권 상대론)(조영남 2006, 301). 이런 중국의 입장은 한국의 인권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규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먼저, 재증 탈북자 문제가 있다(Chung 2009).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재증 탈북자를 “난민”(refugee)으로 간주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국이 이들에게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북·중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상당수의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탈북자를 단순한 “불법 월경자(越境者, illegal escapee)”로 간주한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를 북·중 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들을 체포할 경우 북·중 “비밀협약”에 따라 북한에 인도해 왔다. 그밖에,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 및 망명 요청을 중국의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2005년 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 중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봉쇄한 사건이나, 2004년 12월 탈북자 반송반대 운동을 벌이던 한 국회의원에게 중국대사관이 전화를 걸어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건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조영남 2006, 261). 다만 중국도 한국 정부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실제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를 놓고 한·중 간에는 아직 분명한 규범이 없고, 단기간 내에 이런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인권에 대한 주권 우선론 등 중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인권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북·중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요구대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고, 한국 내에서 인권·종교단체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면 한국 정부도 이를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 처리와 관련하여 한·중 간 규범을 형성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티베트(西藏)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초청 등 한국 내 민간 활동에

대한 중국의 간섭 문제가 있다. 한국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 초청은 “종교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단체의 중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으로 민간단체의 달라이 라마 초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의 소수민족 문제를 영토 및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달라이 라마 초청도 영토 및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권 및 종교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파룬궁(法輪功)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조영남 2006, 261). 이는 최근 들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독일이나 미국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탈북자 문제처럼 이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규범 차이도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의 민간단체가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파룬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한·중 간에는 커다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구성되는 “포괄적 협력동맹”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해왔다(청와대 2009; 김성한 2008a). 이는 한편으로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추어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민주·인권·법치·시장 등 “보편가치”에 입각한 한·미·일 협력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다(Kim 2008).

그런데 만약 한국이 향후에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보편가치에 입각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로 발전시킬 경우, 한국은 외교이념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런 시도를 군사적·이념적 차원에서 한국이 미·일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시정부는 “가치외교”를 전 세계에 걸쳐 실시하고 한국도 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그 주요 대상국의 하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향후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주변국가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된다면, 가치외교는 한·미·일의 대(對) 중국정책으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한·중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명시적인 가치외교 추진은

아니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중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견제정책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한·중 간에는 유사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서해에서 북한 잠수정이 한국 군함을 침몰시킨 사건을 두고 한·미·일의 대북(對北) 공조가 형성되고,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외교적 공세가 강화되었다. 중국은 이런 한·미·일 공조를 대북 봉쇄정책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정책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 협력 요구를 거절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 그 결과 한·중 간에는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및 민간차원 모두에서 상호 불신과 불만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한·중 간에 지역적 차원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또는 지역공동체 건설이 있다. 한마디로, 현재 및 향후에 한·중·일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적극 추진한다면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규범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관련 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둘러싸고 미·중·일 삼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저지함으로써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을 수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및 경쟁관계의 유지, 일본·호주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강화, 아세안(ASEAN) 내 우호세력의 지원, 아시아·태평양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 형성에의 참여 등을 추진해왔다(김성한 2008b, 2008c).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중국의 부상을 저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기하고 추진해왔다. 일본은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고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예를 들어,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을 포괄하는 개방적 아시아주의를 강조한다. 또한, 일본은 보편가치의 추구를 기반으로 일본·호주의 민주동맹 형성과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정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일본은 자국의 동아시아 구상을 미국의 구상과 최대한 접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손열 2008). 특히 2009년 8월에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아시아 중시 방침을 천명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주로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기하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 등 신안보관(新安全觀)에 입각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기능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해 아세안+한·중·일(APT),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상하이협력기구(SCO)도 중국의 지역 구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조영남 2009, 219-274; 서정경·원동욱 2009; 한석희·강택구 2009).

한국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독자적인 동아시아 구상을 제기했다.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마상윤 2007;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6; 박명립 2006).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신아시아 구상”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없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 일부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중·일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한국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던 한·중 FTA 체결 문제를 협상단계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중·일 삼국간의 FTA 체결을 위한 관산학(官産學)합동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단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이질성 즉, 정치체제의 차이,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종교·문화·인종의 차이 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역내 국가의 필요성과 노력에 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은 경쟁 중인 미·일 구상과 중국 구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이 미·일 구상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는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2006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성립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규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살펴보자. 한 마디로, 한·중 간 국력 및 국제지위의 비대칭성(asymmetry)(중국의 우월한 지위)으로 인해 한·중이 세계적 차원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과거에 한국이 중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단적으로, 1989년 톈안먼(天

安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 정부를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켰다. 2008년 3월 티베트 소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및 향후에도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법치 규범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확립되면서 법치 규범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 법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Park and Shin 2008). 한편 중국도 1997년 공산당 제15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을 국가 통치방침으로 확정한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이를 추진해왔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에서는 법치가 적극 추진되고, 입법 과정의 확립과 입법 산출 증가 등 특정 영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應松年·袁曙宏 2001; 北京市依法行政市領導小組辦公室 2006; 劉雲耕 2004; 傅倫博 2000). 그러나 법에 근거한 권력통제와 국민권리의 보호, 철저한 법률 집행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법치와 관련하여 규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한국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중국 직접투자(FDI)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재중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무단철수는, 한국기업이 폐업을 할 때 중국의 법과 제도가 규정한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추진한 후에 몰래 도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무단철수는 채무 미변제와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예를 들어,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靑島市)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06개 한국기업의 무단철수가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2만 2천여 개의 재중 한국기업 중 무단철수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1% 미만으로, 이 문제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언론이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함으로써 한·중 간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무단철수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주로 중국 내 외자기업 청산절차의 미비와 세금·임금·보험료의 소급 추징 등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전경련 2008). 이에 비해 중국 정부는 한국기업의 무단철수를 국내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자 처벌

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기업 및 정부가 여론 조성을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집중 보도와 한국 정부의 조사단 파견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 대외투자의 제1~2위 대상국이고,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경제정책과 법치정책을 좀 더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인식 전환과 중국 법률을 잘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이 다르지만, 중국에 투자한 이상 중국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중(在中) 한인 및 재한(在韓) 중국인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이주와 범죄 문제가 있다. 한·중 간에 민간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중 한인은 2009년 말 66만 명, 재한 중국인은 56만 명(중국동포는 38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2009년 말 117만 명)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한 것이다. 재중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양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06년 경기도 이천 창고 화재사건에서 중국인이 희생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한·중 간 인적 교류는 급증하는 반면, 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사건 및 사고를 처리하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규범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양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소한 문제가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말과 2010년 초 중국 정부가 영국 국적 및 일본 국적의 마약사범들에 대해 영·일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이들 국가 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중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III.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

최근 들어 사회·문화 영역에서 규범 및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간에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단오제(端午祭), 인쇄술, 신화(神話), 혼천의(渾天儀) 등을 둘러싼 각종 “원조논쟁”이 양국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양국 상호에 대한 비호감도(非好感度)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Chung 2007, 99; 2009, 216).

더 큰 문제는 한·중 양국의 국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런 추세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배경으로 한국 내에는 “중화주의”(中華主義)의 재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애국주의를 넘어서는 국수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중국은 불쾌하다』(中國不高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새로운 역사 규범의 형성과 문화충돌 방지가 포함된다.

1. 역사 인식

2004년과 2006년에 중국 학계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역사문제는 한·중 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순수한 학술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외교쟁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항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일부 해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방침과 내용을 고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내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동북공정을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로 보고, 북한 유사시 대응을 위한 사전 포석 즉, 북한의 영토 점령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동북공정을 역사해석에서의 중화주의 부활로 간주한다(이장원·홍우택 2008). 둘째는, 동북공정을 중국 내부 문제의 해결 즉, 역사재해석을 통한 소수민족의 통합 달성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고, 주변국가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이다(이희옥 2008).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동북공정은 한국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중 역사해석 문제는 현재 일시 봉합되었지만 향후 언제든지 다시 제기되어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이 역사 재해석과 교육을 통한 소수민족과 한족 간의 통합,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의 통합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한·중·일 간의 역사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역사논쟁은 한·중·일의 관계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교과서 제작 등 일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중·일 국내 상황 즉, 각국에서의 민족주의 고양, 중국 부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민의 우려 증가, 각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일부 정치가들의 활용 등으로 인해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중화문명과 한류(韓流)

중화문명의 외교적 활용은 중국 소프트 파워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의 설립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2009년 10월까지 87개 국가 및 지역에 모두 523개가 설립되었다. 이 통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설립된 공자학당(孔子課堂: 공자학원의 다른 형태) 약 230개가 포함되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125년간 1,100개,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 66년간 223개,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가 90년간 142개 설립된 것과 비교할 때 이는 큰 성공이다.

또한 중국 내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화 유가문화권”(大中華儒家文化圈) 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한류 확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권”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주장이다(潘忠岐·黃仁偉 2008; 李智 2005; 羅建波 2006).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중화문명의 부흥과 확산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한 “문화표준”(cultural standard)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노력은 한류의 확산과 중국의 대응 즉, “항(抗)한류”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1997년 “사랑이 뭐길래”와 1999년 “별은 내 가슴에”와 같은 한국 드라마와, 2000년 H.O.T 중국 콘서트 등 한국 대중음악이 중국에 확산되면서 한국문화의 대중적 유행인 한류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한국적 문화표준”을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외교정책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한류 확산을 적극 후원했다(이근 2007; Lee 2009).

한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시간이 가면서 변화했다. 초기에는 한류를 수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에서 점차 이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류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처음에는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중국적 가치”와 문화 보호로 확대 발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2005년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UNESCO) 세계 문화유산 등재 후 중국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중국문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화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07년 단오절(端午節)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2009년 5월에는 후베이성(湖北省) 대표단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에 단오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 것을 공식 신청했다.

중국이 중화명명의 부흥과 확산을 도모하는 것과, 한국이 한류의 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아시아 문화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경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한국의 국제지위 추구가 이어지면서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이것이 양국 간 문화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합당한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경제·통상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

한·중관계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인 분야는 경제·통상이다. 그런데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한·중이 경제·통상 문제를 주로 국제기구나 제도를 통해 해결하면서 양국 간의 직접적인 규범 충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런 면에서 이 영역에서의 규범 충돌은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 영역에서 양국 간에 규범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모델 경쟁과 새로운 국제경제규범 형성을 둘러싼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1. 발전모델 경쟁

중국은 “중국모델” 또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을 통해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진국이 아니라 제3세계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한 “모범국가(선진국)”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전성홍 2008; 沈雲鎖·陳先奎, 2007; 潘維 2009; 鄭永年 2010). 중국모델의 확산은 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제3세계 국가를 목표로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실제로 FTA 체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에 그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제3세계 지역에서 중국의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전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식 발전모델”을 제3세계 국가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에 따르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FTA 체결, ODA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식 발전모델을 적극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제기하고 추진 중에 있다(기획재정부 2009). 이를 위해, 한국은 2009년 6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투자 협정 서명을 통한 FTA 체결 완료, 2015년까지 교역량 1,500억 불 확대 등을 합의했다(김기수 2009; 유명환 2009). 그밖에도 한국은 아세안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발전모델 확산은 한·중 모두의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양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각국의 발전모델을 아시아의 발전모델로 확립하는 것은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역내 국가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 외교의 성공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은 양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중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2.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과 “G-20”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4월 제2차 G-20 런던 회의와 동년 9월 제3차 G-20 피츠버그 회의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잠정적인 합의를 보여준다(London Summit 2009; G-20 2009).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차례에 걸친 2009년의 G-20 회의 결과를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보호주의의 반

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또한 세계는 중국의 이런 증대된 역할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지만수 2010). 반면, 한국은 제2차 G-20 런던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승리국”이라고 주장한다(신제운 2009). 특히, 2010년 11월 제5차 G-20 서울회의를 준비하면서 독자적 의제 설정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제시 및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본다.

향후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형성 노력, 특히 G-20 회의를 둘러싸고 개발도상국의 대변인을 자임하는 중국과,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 간에는 일정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명분(최대 개도국)과 실제(잠재적 세계강대국)의 괴리에서 오는 딜레마 때문에 G-8 가입을 거부하고 G-20을 중시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G-20 회의를 통해 중국은 발언권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및 유럽(EU)과 대등한 “규칙제정자”(rule-maker)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은 제5차 G-20 서울회의 개최를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약대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의 편입자 및 규칙준수자에서 국제질서 형성자 및 규칙제정자로 발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윤덕룡·오승환 2009; 신호균 2009)

그런데 새로운 경제규범 형성과 관련된 한·중 간의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 형성될 것으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일대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중의 노력에 따라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논의할 때 공동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할 수 있다(지만수 2010).

V. 결론: 한국의 대응

한·중 간 교류가 확대되고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범 및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은 그 중의 하나이다. 한·중 간 올바른 규범 형성은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중은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⁴⁾

무엇보다 한·중 간의 규범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한마디로, 양국 간 올바른 규범 형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국내외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 한·중 간 올바른 규범 형성과 이를 통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이다. 한·중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고, 여기서 형성된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간 올바른 규범 형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 두 번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특히 역사해석 등 특정 사안은 양국 간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 “관리”가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영역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규범 형성은 양국 간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세계적 과제로서, 양국의 일대일 대응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對) 중국 외교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민주·인권·법치와 같은 보편가치의 실현이 한국의 외교목표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한·중 간 국력 및 국제지위의 차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협조의 필요성,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 존 심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이것이 한국의 외교목표가 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이 보편가치의 수용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고, 이럴 경우 한국이 중국에 행사할 수 있는 수단 (leverage)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이 한국에 각종 수단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국익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한·중관계의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치외교를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신 한국은 한·중 협력을 통해 양국 간에 올바른 규범이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비해 국력의 열세에 있는 한국에게는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이 힘(power)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중 간에 규범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기업·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층위 및 영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범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영역과 주제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자.

4) 정치·외교 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이장규 외(2009)를 참고.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은, 탈북자 문제 등 정부 간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양국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만약 정부 차원에서 제기해야 할 경우에도 가급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제기했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충돌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 규범의 경우에는 양국의 주권 및 국민의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많은 한국 교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중국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중국에 제기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 적극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재중 한국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무조건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항의해야 하지만, 한국기업의 탈법 및 불법행위까지 감싸줄 수는 없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된 지역주의 규범 형성은 한국의 정부·기업·민간 모두가 적극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중 간 국가적 차원의 협력(예를 들어, 한·중 FTA의 추진)과 지역적 차원의 협력(예를 들어, 한·중·일 정상회담과 아세안+한·중·일 내에서의 협력) 모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은 국익 증진과 아시아 지역의 번영 및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국가에 적극 설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을 위해 중·일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이 지역주의 규범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역사해석과 대중문화 등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양면적인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 우선, 한·중 양국 간에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의 문제해결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영역에서는 가급적 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회·문화 현안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학계가 공동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역사해석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

다. 양국의 학술단체와 문화단체가 한·중 양국의 바람직한 문화교류와 소통을 위해 협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이처럼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으로 바람직한 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경제·통상 영역에서는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수립된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을 위한 G-20 회의에서도 한·중 간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함께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식 발전모델을 아시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대규모 경제 원조를 동반한 중국의 공세에 의해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중국모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의 경쟁은 중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뿐이다.

한편, 이상에서 말한 방침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재계·학계·언론계가 합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논의 구조는 영역에 따라 복수로 만들 수도 있고, 성격상 느슨한 협의체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방침을 만들고, 이를 각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비해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통합적인 논의 구조의 구축과 운영은 매우 필요하다.

또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도 있어야 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정부·민간의 합동 협의기제(소위 “1.5 트랙”과 “2 트랙”)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한·중 간에는 “고위급전략대화”(차관급으로 연 1회 개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 개최)라는 정부 간 협의채널 이외에,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2009년 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4월에 3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합동보고서 제출, 제2기 위원회 출범 합의), “한·중전략세미나”(한국의 신아시아연구소와 중국의 개혁개방포럼(改革開放論壇) 간에 2009년 11월에 제1차 회의 개최), “한·중미래포럼”(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1994년부터 개최) 등 매우 많은 공식·비공식 민간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모임이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즉, 한·중 간에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협의된 내용을 정부와 민간에 확산시켜 이를 상호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협의기제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점에서 볼 때 한·중 언론계

간의 제도화된 협의기제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문화논쟁”과 양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는 상당수 양국 언론매체, 특히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중 민간 교류의 확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은 청소년, 대학생, 정계·재계의 미래 지도자 등이 안정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더욱 많이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일 간의 교류 경험을 적극 참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를 한·중 교류에서 한·중·일 교류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교류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10년 4월 23일
심사일 2010년 5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9일

참고문헌

- 강택구·한석희. 2009.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중국의 인식: EAS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 1호, 283-300.
- 기획재정부. 2009. “Beijing Consensus의 개념과 영향 분석”(4월 13일).
- 김기수. 2009. “한국-아세안 제주 정상회의.” 『세종논평』 6월 2일.
- 김성한. 2008a.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신아세아』 15권 1호, 31-50.
- _____. 2008b.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81-119. 서울: EAI.
- _____. 2008c. “지역주의와 다자동맹: 동아시아에서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8권 4호, 7-34.
- 김재철. 2006.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 김태호. 2009. “한·중 관계의 명(明)과 암(暗): 다층적 맥락 및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백권호 편.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소통과 성찰』, 21-60. 서울: 폴리테이아.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6. 『참여정부의 동북아시아대 구상』.
- 마상윤. 2007. “한국의 지역주의 구상: 과거와 현재.” 손열 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 컨센서스』, 239-282. 서울: 지식마당.
- 박명림. 2006. “노무현의 동북아구상 연구: 인식, 비전, 전략.” 『역사비평』 가을호, 148-179.

- 박홍서. 2008.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 위협'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23-68. 파주: 나남.
- 서정경·원동욱. 2009.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집 2호, 263-286.
- 손열. 2008.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165-196. 서울: EAI.
- 신제윤. 2009. "한국, G20정상회의의 승리국." <http://article.joins.com>(검색일: 4월 5일).
- 신호균. 2009. "이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http://www.pressian.com>(검색일: 9월 30일).
- 오승환·윤덕룡. 2009. "제3차 G20 정상회의의 결과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9, No. 33.
- 유명환.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장관 기고." 『외교통상부 뉴스』 6월 3일.
- 이근. 2007.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률. 2008. "한·중 정치관계의 쟁점과 과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227-277. 서울: 오름.
- 이장규 외. 2009.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이장원·홍우택. 2008. "중국의 문화적 팽창주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분석." 『국제정치논총』 48권 2호, 33-52.
- 이희욱. 2008. "역사문제와 한·중관계: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303-338. 서울: 오름.
- _____. 2009.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 시각과 실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1-29.
- 전경련. 2008.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성홍 편. 2008. 『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서울: 부키.
-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파주: 나남.
- _____.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 지만수. 2010. "G20에 임하는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 현대중국학회·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학술대회, 『현대중국의 동학과 근대의 뿌리』(서울, 4월 2일), 363-386.
- 청와대. 2009.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2009. *Defending Australia in the Asia Pacific Century: Force 2030*.
- Chung, Jae Ho. 2007.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South Korea's Evolving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ymbiosis or Mere Cohabitation?" In Shiping Tang, Mingjiang Li, and Amitav Acharya, eds. *Living with China: Regional States and China through Crises and Turning Points*, 211-22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SIS. 2009. *China's Soft Pow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 Finlayson, Jock A., and Mark W. Zacher. 1983.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273-314.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Goldstein, Joshua S. 2002. *International Relations* (Brief Edition). New York: Longman.
- G-20. 2009. *The Global Plan for Recovery and Reform*. <http://www.g20.org/Documents/final-communicue.pdf>.
- Hunter, Alan. 2009. "Soft Power: China on the Global Stag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26.
- Hurrell, Andrew. 2002. "Nor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137-154. London: Sage Publications.
-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2009. *The Rise of China's Power and International Role*. Beijing: Tsinghua University.
- Keidel, Albert. 2008. *China's Economic Rise: Fact and Fic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im, Tae-Hyo. 2008. "Korea's Strategic Thoughts toward Japan: Searching for a Democratic Alliance in the Past-Driven Futur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 No. 2, 141-154.
- Krasner, Stephen D.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1-21.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ee, Geun. 2009. "A Soft Power Approach to the 'Korean Wav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2. No. 2, 123-137.
- Li, Mingjiang. 2008. "China Debates Soft Power."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

287-308.

- _____. ed. 2009. *Soft Power: China's Emerging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ondon Summit. 2009. *Outcomes of the London Summit*. <http://www.londonsummit.gov.uk/en/summit-aims/timeline-events/summit-outcomes>.
- Lu, Yeh-Chung, and Hongying Wang. 2008. "The Conception of Soft Power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Taiwa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7. No. 56, 425-447.
- Lum, Thomas, Wayne M. Morrison, and Bruce Waugh. 2008. *China's 'Soft Power' in Southeast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2008. "The Mass Public and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Exploring the Subjective World of Democratization in Flux." In Yun-han Chu, Larry Diamond, Anthrew J. Nathan, and Doh Chull Shin, eds.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3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and Christopher B. Whitney. 2009. *Soft Power in Asia: Results of a 2008 Multinational Survey of Public Opinion*.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nd EAI.
- Wuthnow, Joel. 2008. "The Concept of Soft Power in China's Strategic Discourse." *Issues & Studies* 44. No. 2, 1-28.
- 羅建波. 2006. "構建中國崛起的對外文化戰略." 『現代國際關係』37, 33-37.
- 劉雲耕 主編. 2004. 『現代化與法治化: 上海城市法制化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李智. 2005. 『文化外交: 一種傳播學的讀解』,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潘維 主編. 2009. 『中國模式』,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 潘忠崎·黃仁偉. 2008. "中國的地緣文化戰略." 『現代國際關係』17, 44-49.
- 傅倫博 主編. 2000. 『建設社會主義法治城市: 深圳市依法治市的探索和實踐』, 深圳: 海天出版社.
- 北京市依法行政市領導小組辦公室 編. 2006. 『邁向法治北京(1991-2005)』, 北京: 海洋出版社.
- 應松年·袁曙宏 主編. 2001. 『走向法制政府: 依法行政理論研究與實證調查』, 北京: 法律出版社.
- 鄭永年. 2010. 『中國模式: 經驗與困居』,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沈雲鎮·陳先奎. 2007. 『中國模式論』, 北京: 人民出版社.

ABSTRACT

Development of Sino-South Korean Relations and Norm Conflicts

Young Nam Cho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orm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 in 1992, Sino-South Korean relationship has splendidly developed in various areas.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akes place has simultaneously increased, and norm conflict is one of the most serious areas. At present, South Korea and China witness norm conflicts concerning some issues, includ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rule of law, historical disputes, diffusion of mass culture, and developmental models.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make their efforts preventing norm differences from deteriorating into norm conflicts for more stable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 in the future.

Keywords: Sino-South Korean relations, norm conflict, soft power, historical disputes, Korean wave